

<2022 행정사 행정학 기출문제 및 해설>

1.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는 지역주민이 그 지역의 제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 ② 지방자치는 정치적 활동과는 무관하며 공공행정의 가치를 중시한다.
- ③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을 전제로 하며, 주민참여는 ‘풀뿌리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라는 공법인을 통해 주민에게 필요한 주요 정책의 실험장 역할을 한다.
- ⑤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과 정책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립한다.

<해설>

- ② (X)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이자 훈련장으로서 주민의 정치교육에 기여합니다(정치적 활동과는 무관 X).
- ④ (O) 지방자치는 지역적 실험을 통한 다양한 정책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답: ②

2.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 ① 예산총칙
- ② 세입세출예산
- ③ 계속비
- ④ 명시이월비
- ⑤ 국가결산보고서

<해설>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합니다(국가결산보고서 X).

「국가재정법」 제19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답: ⑤

3. 우리나라 근무성적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 ① 정무직 공무원
- ②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 ③ 3급 이상 별정직 공무원
- ④ 4급 이상 공무원
- ⑤ 5급 이하 공무원

<해설>

⑤ (O) 근무성적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5급 이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근무성적평가의 대상) 5급 이하 공무원, 우정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답: ⑤

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유형과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와 시·군·구(자치구)가 포함된다.
- ②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법인으로서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고 자치구를 둔다.
- ④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사무 처리와 조례 제정을 할 수 없다.
- ⑤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해설>

③ (X)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시) 등에 대해서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구를 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답: ③

5.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주민의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 A씨(30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발전과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
- ② ○○시 주민 B씨(20세)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시 조례의 제정을 청구하였다.
- ③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베트남국적 C씨(45세)는 국내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현재 3년이 지났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시 비례대표 시의원의 심각한 불법행위 문제를 알고 있는 ○○시 주민 D씨(55세)는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위한 요건을 갖추더라도 주민소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시 주민 E씨(57세)는 시의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의 위법에 대해 감사청구한 자로서, 그 감사 결과에 불복하고 법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하였다.

<해설>

- ③ (X)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市·道)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大都市)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市·道)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답: ③

6. 행정학의 주요 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제도주의론은 공식적 제도나 구조는 물론 비공식적 제도와 규범도 중요하게 강조한다.
- ② 행태주의 행정연구는 가치와 사실문제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체제이론은 행정현상을 여러 변수 중에서 환경을 포함해 거시적으로 접근한다.
- ④ 인간관계론은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성과 능률성에 기반을 둔 금전적 보상과 경제적 인간관을 강조한다.
- ⑤ 신행정학 이론은 참여와 형평의 가치를 중심으로 현실문제의 처방적 연구를 중시한다.

<해설>

- ① (O)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공식적인 체제나 구조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규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② (O) 행태론에서는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여 주관성이 개입되는 가치판단의 문제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③ (O) 체제론은 행정조직을 하나의 유기체(좁은 의미로는 생물)로 보고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환경적 요소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행정을 연구하려는 개방체제적 접근법입니다.
- ④ (X) 금전적 보상과 경제적 인간관을 강조하는 것은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 ⑤ (O) 신행정학은 빈부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형평성을 중시합니다.

답: ④

7. 신공공서비스 행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시민을 자율적인 소비자 또는 고객으로 간주한다.
- ㄴ. 민주적 시민의식론과 조직적 인본주의를 이념으로 한다.
- ㄷ. 공공행정의 다양한 가치와 책임성 문제에 관심을 둔다.
- ㄹ.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합리적 선택과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강조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 ㄱ. (X) 신공공서비스론은 고객이 아닌 시민에 봉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ㄴ. (O) 신공공서비스론의 인식론적 토대는 민주주의, 실증주의, 현상학, 비판이론, 신행정론, 포스트모더니즘 등 복합적입니다.
- ㄷ. (O) 신공공서비스론은 법, 지역공동체의 가치, 정치 규범, 전문적 기준 등 다면적 책임성을 강조합니다.
- ㄹ. (X)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합리적 선택과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공공선택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답: ③

8.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태가 아닌 것은?

- ① 국고보조금
- ② 지방교부세
- ③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④ 조정교부금
- ⑤ 국고부담금

<해설>

- ③ (O)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개발 및 지역혁신을 위한 사업을 지역의 특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에 설치되었습니다.
- ④ (X)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재정을 조정해주는 제도로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아닙니다.

답: ④

9. 전자정부와 공공행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자정부 발전으로 인한 정보화의 역기능은 사회적 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디지털 위협으로 진행될 수 있다.
- ② 일반적으로 정보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행정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해소 내지 완화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정부의 맞춤형 전자서비스와 빅데이터 산업 고도화 차원에서 개인정보의 행정기관 간 공동 활용은 중요하다.
- ④ 전자정부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거래비용과 기회비용 및 민원업무 감소에 기여한다.
- ⑤ 전자정부의 발달에 의한 공공데이터 개방은 행정정보의 독점적 소유를 촉진시키고 있다.

<해설>

- ⑤ (X)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국민들이 보다 쉽고 용이하게 공유·활용할 수 있습니다(행정정보의 독점적 소유 X).

답: ⑤

10. 시장실패의 이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정부의 공공지출에 대한 순편익 극대화 보장의 어려움
- ㄴ. 공공서비스 성과평가의 객관적 기준설정의 어려움
- ㄷ. 국방 및 치안서비스 활동과 같은 공공재의 독점적 성격
- ㄹ. 환경오염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 ㄱ. 정부의 공공지출에 대한 순편익 극대화 보장의 어려움과
- ㄴ. 공공서비스 성과평가의 객관적 기준설정의 어려움은 정부의 비효율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 ㄷ. 공공재와   ㄹ. 외부불경제는 시장실패의 요인입니다.

답: ⑤

11. 기계적 조직과 학습조직의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계적 조직은 위계적·경직적 조직문화를 갖는데 비해 학습조직은 적응적 조직문화를 갖는다.
- ② 기계적 조직은 조직원의 재량과 책임을 중시하나 학습조직은 조직원 과업을 상세히 규정한 표준화·분업화에 의해 수행한다.
- ③ 기계적 조직은 경쟁을 중시하나 학습조직은 협력을 중시한다.
- ④ 기계적 조직은 수직적 구조이나 학습조직은 수평적 구조를 지향한다.
- ⑤ 기계적 조직은 정보가 최고관리층에 집중되는 반면에 학습조직은 조직원들에게 공유된다.

<해설>

- ② (X) 반대입니다. 기계적 조직은 조직원 과업을 상세히 규정한 표준화·분업화에 의해 수행하고, 유기적 구조인 학습조직은 조직원의 재량과 책임을 중시합니다.

답: ②

12.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체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하는 공무원은 전원 중앙행정기관 소속이다.
  - ② 각 부처 장관은 소속에 관계없이 전체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책임자를 인선한다.
  - ③ 계급과 연공서열 보다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추구한다.
  - ④ 행정부처에 배치된 고위공무원의 인사와 복무는 소속 장관이 관리한다.
  - ⑤ 고위직의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해설>

- ① (X)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국장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위도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므로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하는 공무원 전원이 중앙행정기관 소속인 것은 아니다.
- ② (O) 고위공무원단은 전정부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합니다.
- ③, ④, ⑤ (O)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역량 중심(역량평가 제도 도입), 성과와 책임 중심(직무성과계약제 등), 개방과 경쟁 중심(개방형 직위 등)의 인사관리를 특징으로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2항·제125조 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답: ①

13. 우리나라 인사혁신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인사규칙을 제정한다.
- ②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독립합의형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 ③ 인사 법령에 따라 인사행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를 수행한다.
- ④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⑤ 인사행정을 수행하는 중앙정부의 인사행정기관이다.

<해설>

- ② (X) 우리나라 인사혁신처는 비독립단독형이고,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정부조직법」

제22조의3(인사혁신처) ①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 ④ (O)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답: ②

14.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평생 직업으로 선택하여 근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 ②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한다.
- ③ 폐쇄적 임용으로 인해 공직분위기의 침체가 우려된다.
- ④ 일반행정가 보다는 전문행정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 ⑤ 신분보장으로 인해 무사안일과 관료의 병리현상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

<해설>

- ④ (X)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이 오랜 기간에 걸쳐 공직에 근무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므로 전문가 보다는 폭넓은 시각과 안목을 가진 일반행정가의 양성에 유리합니다.

답: ④

15. 정부조직체계에서 청 단위기관과 소속부처의 연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ㄱ. 기상청 - 환경부<br>ㄴ. 방위사업청 - 산업통상자원부<br>ㄷ. 소방청 - 행정안전부<br>ㄹ. 특허청 - 기획재정부<br>ㅁ. 해양경찰청 - 국방부 |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ㄷ, ㅁ

<해설>

- ㄱ. (O) 기상청 → 날씨는 환경과 관련 → 환경부
- ㄴ. (X) 방위사업청 → 군사·안보 관련 → 국방부
- ㄷ. (O) 소방청 → 안전 관련 → 행정안전부
- ㄹ. (X) 특허청 → 특허 기술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
- ㅁ. (X) 해양경찰청 → 바다 관련 → 해양수산부

답: ①

16. 조직구조의 분권화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규칙과 절차의 합리성·효율성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
- ② 조직이 속한 사회의 민주화가 촉진되고 있다.
- ③ 기술과 환경이 격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 ④ 고객에게 신속하고 대응적인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 ⑤ 조직구성원들의 참여 확대와 창의성 발현이 요구되고 있다.

<해설>

- ① (X) 규칙과 절차의 발달은 집권화의 형성요인입니다.
- ②, ③, ④, ⑤ (O) 조직이 속한 사회의 민주화가 촉진된 경우, 기술과 환경 변화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서비스 향상에 대한 요청, 창의성 발휘에 대한 요청, 힘 실어주기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등은 분권화의 형성요인입니다.

답: ①

17. 행정통제 유형 중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대통령에 의한 통제
- ② 중앙행정부처에 의한 통제
- ③ 감사원에 의한 통제
- ④ 사법부에 의한 통제
- ⑤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

<해설>

- ① 대통령, ② 중앙행정부처, ③ 감사원(대통령 소속), ⑤ 국무조정실은 내부통제이고, ④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외부통제에 해당합니다.

답: ④

18. 국회의 예산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결산 심의를 한 결과 문제가 있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결산은 회계연도에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 ③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 ④ 부당한 지출이 발견된 경우 그 책임을 요구하고 무효화할 수 있다.
- ⑤ 재정운용의 비능률이 발견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차년도 예산과정에서 쟁점화될 수 있다.

<해설>

- ① (O)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①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X) 결산은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지적되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 ⑤ (O) 결산심사의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예산 심의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환류 기능을 수행합니다.

답: ④

19. 정책집행에서 하향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정책결정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수록 정책은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 ② 정책결정의 결과물인 정책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을 정책 집행으로 이해한다.
- ③ 정책집행 현장에서 집행조직과 정책사업 사이의 상호적응이 강조된다.
- ④ 정책이 결과물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심이 있다.
- ⑤ 정책결정단계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참여자와 정책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해설>

- ①, ④, ⑤ (O) 하향적 접근방법은 정책결정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② (O) 하향적 접근방법은 정책집행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채택된 정책결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으로 인식합니다.
- ③ (X)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상향적 접근입니다.

답: ③

20. 정책과정의 참여자 중 공식적인 참여자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이익집단
- ② 입법부
- ③ 정당
- ④ 시민단체
- ⑤ 민간전문가

<해설>

입법부는 공식적인 참여자이고 나머지는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답: ②

21.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면 회피신청이 면제된다.
-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 ① (X)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② (O)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
- ③ (O)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
- ④ (O)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
- ⑤ (O)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답: ①

22. 행정개혁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규범적·사회적 전략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의사전달과 참여의 확대
- ㄴ. 개혁의 공공성에 대한 홍보
- ㄷ. 사명감 고취와 역할 인식 강화
- ㄹ. 권력구조 개편과 긴장 조성
- ㅁ. 신분보장과 경제적 보상
- ㅂ. 가치갈등 해소

-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ㅂ
-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 ⑤ ㄷ, ㅁ, ㅂ

ㄱ. 의사전달과 참여의 확대, ㄷ. 사명감 고취와 역할 인식 강화, ㅂ. 가치갈등 해소는 사회적·심리적 지지를 통해 자발적 협력과 개혁의 수용을 유도하려는 방법인 규범적·사회적 전략입니다.

ㄴ. 개혁의 공공성에 대한 홍보, ㅁ. 신분보장과 경제적 보상은 공리적·기술적 방법에 해당하고, ㄹ. 권력구조 개편과 긴장 조성은 강제적 방법에 해당합니다.

답: ②

23. 행정개혁의 구조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체계의 구조적 설계를 개선함으로써 행정개혁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접근방법이다.
- ② 분권화 수준의 개선, 권한배분의 개편, 명령계통의 수정, 작업집단의 설계 등을 추진한다.
- ③ 주된 목표는 기능중복의 제거 및 표준적 절차의 간소화 등이다.
- ④ 조직의 분권화를 통해 조직계층의 단순화, 명령과 책임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다.
- ⑤ 공무원의 의식개혁, 업무자세 및 태도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다.

<해설>

- ⑤ (X) 공무원의 의식개혁, 업무자세 및 태도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행정인의 가치관과 행태를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행정체제 전체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려는 전략인 행태적 접근방법입니다.

답: ⑤

24.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책집행의 유형은?

정책결정자가 세부적인 정책내용까지 결정하며, 정책집행자들은 상세한 부분에 대해 아주 제한된 부분의 재량권만 인정받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 ① 고전적 기술관료형
- ② 지시적 위임형
- ③ 협상형
- ④ 재량적 실험가형
- ⑤ 관료적 기업가형

<해설>

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를 명확히 설정(세부적인 정책내용까지 결정)하고 정책집행자가 아주 제한된 부분의 재량권만 인정받는 상황은 고전적 기술자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 ①

25.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 ① 사회 이슈와 관련된 행위자가 많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수의 정책 대상 집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보다 쉽게 정책의제화될 수 있다.
- ② 사회문제로 인한 피해자 숫자가 많거나 피해의 사회적 의미가 중대할수록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 ③ 정책의제설정은 정책이해관계자, 이슈가 되는 정책문제, 문제를 논의하는 제도적 환경 등 복합적인 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④ 국민적 관심과 집결도가 높거나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 정치인의 관심도가 클수록 정책의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 ⑤ 정책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와 영향력이 클수록 정책의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해설>

- ② (O) 사회문제의 중요성이 크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수록 정부의제화가 되기 쉽습니다.
- ③ (X) 정책의제설정은 정책이해관계자, 이슈가 되는 정책문제, 문제를 논의하는 제도적 환경 등 복합적인 관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답: ③